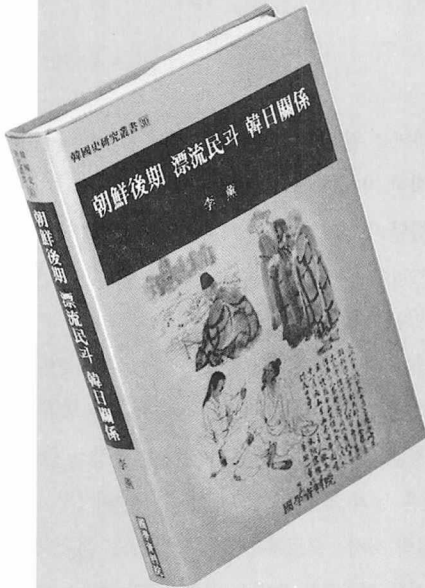


조선시대 표류민의 전체상 탐구 '해양에서 본 한국사' 연구의 시발점

《조선 후기 표류민과 한일관계》



이훈 지음
국학자료원/A5신/486면/20,000원

표류민이란 항해 도중 태풍이나 해류에 휘말려 목적지가 아닌 다른 곳에 도착한 사람을 가리킨다. 선박과 항해기술이 발전하지 못했던 전근대 동아시아 해역의 표류사고는 기록에 남아있는 것보다 훨씬 많았을 것이다. 당시 한국·중국·일본·유구 등은 국제적 공조에 의한 '표류민 송환체제'를 가동하고 있었지만 각국의 정치체제가 다른 점 등의 여러 문제로 표류민들은 표착지에서 장기간 체류하지 않을 수 없었다.

표류할 때부터 고국에 송환되기까지의 시간은 표류민에게 긴장과 괴로움의 연속이었겠지만, 한편 쇄국체제하에서 남들이 꿈에도 가보지 못하는 '해외여행'을 하고, '이국문화'(異國文化)를 체험하게 되는 셈이다. 이처럼 표류는 본인인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모험과 로망의 세계다. 표착지 주민과의 교류와 정보교환, 이문화 체험, 해외의 '별천지와 상상의 세계'를 직접 보고 온 표류민들의 이야기는 일반인들에게 호기심의 대상이 됐고, 그들의 체험기록은 일반인들에게 널리 회자했다.

다시 말하면, 표류는 전근대 동아시아의 쇄국체제하에서 민간교류의 한 통로였으며, 민중들 간에 교류할 수 있는 조그만 '숨구멍'일 수 있었

다. 비록 변경지역에서 일어나는 경계인간의 제한된 교류기는 하지만 정부간의 사절 왕래보다 훨씬 빈번했던 만큼 그 의의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이처럼 표류는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주제다. 역사나 외교사적 측면만이 아니라 문화인류학·지방사·기술사·교통사·경제사·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접근할 수 있는 주제다. 즉, 표류를 통해 연안 주민의 생활 패턴을 알 수 있고, 교류주체로서 '민'(民)의 동태를 밝힐 수 있으며, 표류 동기를 분석해 민의 의식과 생활상을 알 수 있다.

해양국가인 일본에서는 표류민들이 남긴 기록이 우리나라보다 풍부하며, 연구성과도 많이 축적돼왔다. 이에 비해 국내의 연구를 보면, 문학적 측면에서 표류를 다룬 연구가 몇몇 있었을 뿐 역사학적 측면에서 표류를 정면으로 접근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의 의의는 매우 크다.

이 책의 특징은 조선시대 한일간의 표류에 관해 종합적으로 고찰했다는 점이다. 제1부 5편의 논문에서는 표류민의 송환체제 문제를 체제론적 관점에서 접근했는데, 시기적으로 조선전기부터 개항기까지 다루며, 한·일 양국민의 표류를 모두 대상으로 한다. 제2부 3편의 논문에서는 표류민 송환과정의 구체적인 사례분석을 통해 교린체제의 실상에 접근했다. 이 점에서 이 책은 조선시대 표류민 문제에 관해 전체상과 그 추이를 포괄하고 있는 표류문제에 관한 국내최초의 본격적인 연구서다.

우리나라가 21세기에 대륙국가보다는 해양국가를 지향해야 된다고 할 때 표류에 관한 연구는 더욱 중요한 과제다. 우리의 미래를 '해양국가 한국'에서 찾아야 한다면, 역사 연구에서도 '해양에서 본 한국사'라는 새로운 시야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은 절실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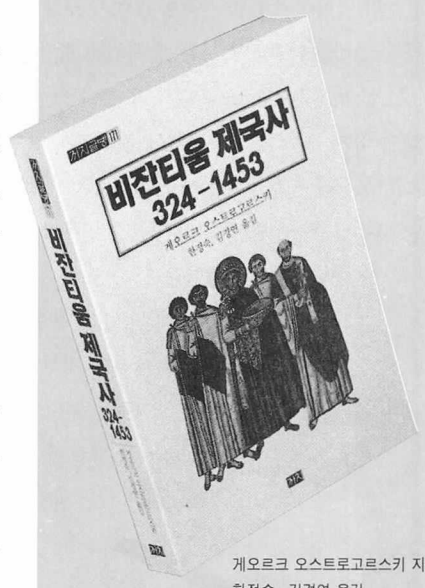
이 책의 출간을 계기로 표류에 관한 좀더 본격적인 연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하우봉

전북대 사학과 교수. 저서 《조선 후기 실학자의 일본관 연구》 《강좌 한일관계사》(공저) 《독도와 대마도》(공저) 《조선과 유구》(공저) 외.

가장 표준적인 비잔티움사 개설서 황제권력과 영역의 부침 묘사

《비잔티움 제국사 324-1453》



게오르크 오스트로고르스키 지음
한정숙·김경연 옮김
까지/A5신/528면/17,000원

비잔티움 제국은, 천년 넘게 존속한 보기 드문 장수 문명이라는 사실에 비해, 그 역사적 관심은 오랜 동안 아주 빈약한 편이었다. 마치 너무 비범한 아버지의 그늘에 가린 아들의 숙명처럼, 비잔티움 문명 역시 아버지격인 그리스-로마의 찬란한 문명에게 못난 자식 혹은 의붓자식 같은 존재로 취급돼왔기 때문이다. 근대 역사가이 성립한 19세기 이래 서유럽에서 비잔티움사는 연구 우선 순위에서 고대 근동사보다도 오�히려 뒤쳐져 있었다. 18세기에 나온 에드워드 기번의 《로마제국 쇠망사》를 제외하면, 20세기초까지 비잔티움사만을 다룬 통사류는 전무한 상태였다.

서유럽은 20세기로 전환할 무렵 전문 학술지를 발행하는 등 비로소 비잔티움사 연구에 조금씩 적극성을 보이기 시작했고, 양차 대전 사이까지는 비잔티움 역사를 개관하는 몇종의 통사류가 각국어로 출판됐다. 영어 및 불어권에 비해 조금 뒤진 편이었지만, 독일어권에서 처음 출간된 개설서는 초판 당시(1940년)는 물론 지금까지도 가장 표준적이라고 평가받아왔다. 오스트로고르스키의 《비잔티움 제국사 324-1453》가 바로 그것이다.

이 책은 그 평판에 걸맞게 곧 미국의 저명한

비잔티움 학자가 영어로 옮겼고(1957년), 마침내 20세기의 끝자락에는 우리말로도 번역되기에 이르렀다. 좀더 대중적 독자들을 위해 연구사·참고문헌·각주 등을 생략해 무겁고 두툼하던 첫 인상을 한결 떨쳐버린 독일어의 제3판(1965년)이, 우리말 번역의 대본으로 사용됐다.

이 책이 가장 표준적 개설서라는 평가의 근거는 이렇다. 제국이란 정치적 실체의 본질적 두 측면, 즉 황제권력과 영토적 기반이 천여년에 걸쳐 겪은 부침을 시간의 흐름을 따라 자상히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 속에 교회·군대·제국을 위협한 주변 국가들과 이주 민족들 등 그 우여곡절에 관련된 주요 요인들이 날줄과 씨줄처럼 촘촘히 엮여 있음은 물론이다. 그처럼 길고 복잡한 얘기들을 이렇게 단 한권의 책 속에, 그것도 글의 생기를 잃지 않으면서 담아내기란 분명 쉽지 않은 일이다.

비잔티움 문명의 다양한 삶의 방식들, 즉 신앙과 사상, 문학과 예술, 생산과 교환의 지배적 양식들, 사회계층들과 갈등의 양상들, 가족과 혼인과 장례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아쉬워 할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저자는 늘 황제가 중심이 된 사건들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종종 사회·경제·문화적 요인들에 시선을 주며, 어느 점에서는 바로 그 요인들로서 정치적 역동성을 설명하려 했다.

우리말 번역은, 역자들이 전공자들이 아님에도 매우 신뢰할 만하며, 또 읽는데 막힘이 없을 만큼 문장도 매끄럽다. 굳이 한두개 흠을 잡자면, 우선 용어의 번역이나 역주에 더러 부정확한 곳이 있다는 점, 둘째로 특히 행정관직 등을 위시한 제도에 관련된 용어들을 최소한 역주조차 붙이지 않고 그대로 음역했다는 점이다. 두번째 점은 원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독자들이 고전 그리스어·라틴어에 생소한 만큼 더 친절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보완되길 기대하며, 좋은 책을 번역해준 역자들에게 감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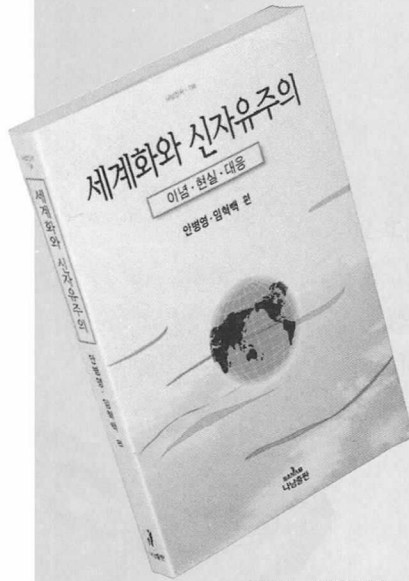
김경현

고려대 서양사학과 교수. 저서 《서양 고대사 강의》(공저) 《서양사 강의》(공저) 역서 《고대 그리스사》 외.

서평

세계화에 대한 다양한 조망 논의대상에서 미국 빠져 아쉬워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 이념·현실·대응》



안병영·임혁백 편역
나남출판/A5신/414면/14,000원

현실이 복잡다단하듯이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정확한 이해도 간단치가 않다. 더구나 이것들이 우리사회에서 자생적이라기보다는 밀고 들어온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이런 현실에서 전문가들이 토론을 거쳐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를 묶어 낸 것은 일단 환영하고 볼 일이다.

이 책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이념과 현실 등, 정확한 이해를 위해 필요한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저자들 모두가 그 이념과 현실에 동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역시 부제에 명시된 '대응'에 꽤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고 대부분 비판적인 논의를 펼치고 있는 데서도 이를 알 수 있다.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를 충격으로 받아들이면서(안병영), 복지의 후퇴(정무권)나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임혁백, 손호철) 등을 우려하며 대응이 필요함을 이구동성으로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대응과 관련해 다소 의견이 엇갈리고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책의 구성은 나름대로 체계를 갖췄지만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 '세계화'라는 용어 자체가

시사하듯, 이는 반드시 세계체제론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세계적 차원의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본격적으로 다룬 글이 발견되지 않는다. 전후 자본주의의 황금기에 이어진 선진국의 장기불황, 이에 따른 케인지안 복지국가의 위기, 기술혁명에 따른 생산체제의 변화, 노조를 비롯한 이익집단의 '과도한' 정치참여에 대한 반동, 그리고 구사회주의 체제의 몰락 등과 같은 역사적 맥락 속에서 신보수주의의 이념에 기초한 세계화가 확산돼온 현실이 좀더 입체적으로 조명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이에크나 프리드만의 이론에 정확한 이해가 요구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고 이에 대한 저자들(김 군, 장세진)의 기여는 평가돼야겠지만, 이들 이론과 세계화 및 신자유주의의 현실과의 연결(혹은 괴리)을 명시적으로 밝혀주는 것이 이 책 출간의 취지에 더 충실한 것이 아닌가 한다. 특히 후자의 경우 프리드만에 대한 국내학자들의 이해부족에 기초한 '경멸'을 질타하고 있는데, 그 사실 여부부터 검증돼야겠지만 그보다 앞서 전체 주제의 흐름에서 이탈한 것 같아 못내 아쉽다. 독일의 신자유주의(이해영)도 변화된 역사현실 속에서 재조명될 가치는 충분히 있지만, 그보다는 혹은 추가해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의 이론가들이 논의의 대상이 돼야 할 것이 아닌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현실을 영국(고세훈), 유럽(조홍식), 라틴아메리카(정진영)에서 참조하는 것은 매우 유익하다. 그러나 정작 그것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을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아쉽다 못해 기이하다는 느낌이다. 그리고 공히,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에 우리보다 먼저 영향을 받아온 이들 사회의 현실은 좀더 구체적으로 분석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국의 현실에 대한 분석과 대응방안이 그다지 구체적이지 못한 것은 이해되나, 반드시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니다.

김대환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저서 《민주적 시장경제 : 원리와 정책과제》 《발전경제학》 외.